

민주통합당 全大 ‘흥행 대박’

지도부 선출 선거인단 79만명 접수…정당 사상 최대 규모

30~40대가 절반…수도권 59% 호남 22%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정당 사상 최대 규모인 79만273명으로 집계되면서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4면>

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까지 선거인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선거인단은 대의원 2만 1000명, 시민 64만3353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당비 당원 12만792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당 사상 최대 규모여 민주통합당이 당초 예상한 25만~30만명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바일 투표 신청자가 88,4%에 달했으며 선거인단 신청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접수가 62.7%에 달해 ‘20~40세대’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비율이 44.4%와 55.6%로 집계 됐으며 30대~40대의 참여는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선거인단은 신청자역이 파악된 일반시민 선거인단 57만5148명 중 서율이 20만1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1만6128명, 인천 2만 3493명 등 수도권이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남 5만1036명, 광주 4만30명, 전북 3만9428명 등 호남이 22.7%, 부산(1만7628명)·경남(1만 2392명)·대구(1만 1914명)·경북(8193명)·울산(5381명) 등 영남이 9.7%였다.

이번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은 대

의원투표 30%와 당비당원 및 시민 선거인단 투표 7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민 선거인단 가운데 모바일 투표를 희망한 사람이 88.4%를 차지했고 나머지 11.6%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했다.

민주통합당은 원래 9~11일 사흘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예상을 크게 초과하자 투표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비 당원 투표와 관련, 우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되 모바일 투표로 실패할 경우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의원은 전원 현장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모바일 투표 결과와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넘는 30~40대 표심이 당락을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일반 시민의 선거인단 참여가 64만

명에 이르러 조직선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경선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는 물밀 합종연횡과 함께 ‘뭉치 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총, 정봉주 팬클럽,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의 흥행 대박에 대해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 및 당비당원 투표 결과는 14일 투표가 끝나는 대로 미집계 상태로 이동식 디스크(USB)에 담겨 참관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모여서 보관되며, 1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끝나면 함께 접게돼 공개된다. /임동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5층 건물 옥상에 건축물이 무단 증축돼 버젓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옥상의 불법 건축물들은 대부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소방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건축 판치는 문화수도

상 위법 실태

“법 지키면 바보” 증축 난장판

46%가 위법…적발돼도 이행금 내고 버텨

광주지역 건축물 상당수가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 다가구주택(원룸) 대부분은 가구 수를 편법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 위반건축물 일체정비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건축관계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개소로 점검대상 83건의 46%에 달했다.

점검대상 선정이 무작위로 이뤄졌고 이미 설계·감리 과정을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신규 건축물 중 절반 가까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위법 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으며 구조 변경, 컨

테이너 무단 설치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적발된 광주시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용도변경, 무단 증축, 전면 개조를 통한 가구수 증가 등 무려 5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건축이 난무하고 있는데는 허술한 승인제도와 건축사의 윤리의식 실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에 관한 설계·감리·사용승인 등을 건축사나 건축사 협회가 맡고 구청은 서류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주와 건축사가 합법하면 위법을 막을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다. 일부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증축하거나 건축사와 째고 서류상으로만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로부터 시공권을 따내야하는 건축사와 시공사의 공생관계가 지속되고 이를 각자구가 묵인하면서

불법이 만연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등의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만 그 대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 허술한 제재조치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건축주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건축사와 째고 시공조차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늘리기 등 불법 건축은 공공연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감리자와 현장 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봉 광주시건축총괄장은 “작년 불법 다가구주택 대거 적발 이후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물 지도점검위를 구성해 시와 함께 정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돈봉투 폭로 고승덕의원 소환

검찰, 살포자 추궁…특정인 거명땐 우선 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서초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율검찰청사에 출두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 이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어느 후보 층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단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층과 실제로 돈봉투를 둘린 사람의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 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전남 억대부농 2753농가

2010년 보다 37% 늘어…축산농 46%

전남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억대 부농들이 2700여농가에 이르고 영암·예산·진도·장성·광양·여수 등 300농가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 등 진보된 영농기술 습득과 품목별 조직화·규모화 등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8일 지난해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억원 이상 3억 미만 277농가(10.1%), 3억 이상 5억 미만 146농가(5.3%), 5억 이상 10억 미만 50농가(1.8%) 등이며 10농가는 10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암이 302농가로 가장 많았고 고흥(253농가), 나주(224농가), 강진(223농가), 해남·영광(202농가), 무안(200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치단체는 ‘1억농 CEO 육성계획’이나 ‘부농 만들기 프로젝트’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이 1269농가(46.1%)로 가장 많았고 식량작물 765농가(27.8%), 채소 308농가(11.2%)가 뒤를 이었다. 또 과수 142농가(5.1%), 가공·유통 118농가(4.3%), 특용작물 51농가(1.8%)로 나타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

2월7일 접수 마감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

제47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문의: 062-220-0541 홈페이지: <http://Kjmarathon.co.kr>



*경강기능 식품(홍삼성분함유제품)

고객센터 1588-2304, 080-041-0303 유동기한 확인하여 제품선택을 바르게

